

계층별 북한 주민의 ‘생존방식’*

조 정 아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계층별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탈북자 심층면접 분석 결과,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 이후 북한에서는 계층을 불문하고 생존을 위한 다양한 ‘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공식·비공식 시장’을 통한 ‘비사회주의적 행동’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비사회주의 현상’과 ‘비법적 시장활동’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당과 근로단체를 통한 ‘반자본주의 사상교양’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 통제 강화는 생존위협 지속, 일상생활에서의 시장적 요소 영향력 증대, 외부로부터의 정보와 문화 유입 확대, 전반적인 주민 불만 증대 등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당국과 주민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사건은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이었다. 경제난 극복 과정에서 자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장화 추세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경제난으로 인한 국가의 공백을 시장이 대신했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중심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생산활동이 진행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먹고 입고 거주하고 쉬는 방식, 국가·가족·이웃과의 관계, 생각하고 판단하고 소통하는 틀과 방식도 변화하였다.

경제난과 그에 따른 자생적 시장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계층별, 직업별로 상이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층, 지식인계층, 권력엘리트계층, 신흥상인계층, 여성 등 북한 주민들의 계층별 일상생활 변화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노동계층의 일상생활 양식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 키워드는 ‘생존’, ‘일당’, ‘비법’, ‘브로커’이다. 전력과 자재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구조화되면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직장에서의 노동 대신에 장사, 가내작업, 일당노동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상적 노동생활이 형식화되고 일당제를 비롯한 다양한 주변직업이 생겨났다. 비공식적 생존시스템이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비법적’ 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비법적 노동시장에서의 거래를 매개하는 브로커도 등장하였다.

둘째, 지식인계층의 일상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부업’, ‘관계망’, ‘지식 판매’, ‘비법과 뇌물’, ‘공동생산’이다. 지식인들은 여가시간이나 노동시간의 일부분을 활용해서 시장과 연계된 부업을 하거나, 학부모나 환자 등 직업상 연계되는 사람들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얻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개인 교습, 개인적 의료행위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 기술을 사적으로 판매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때로는 불법 의료행위나 성적 흥정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기관 자체적으로 소토지 경작과 같은 구성원 생계 보조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한다.

셋째, 권력엘리트계층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의식과 행위 유형은 ‘제도기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 이 글은 2008년도 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서재진·임순화·김보근·박영자 박사 공저)을 요약한 것임.

수 있다. 권력엘리트들은 제도에 기생하여 불법적인 생계별이를 하고 있는 동시에 체제의 모순에 대해 인식하고 변화를 추구한다는 특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권력엘리트들이 소속기관, 기업소, 소속단위의 능력에 따라 ‘자력갱생’함에 따라, 이들의 생활수준은 소속단위의 능력에 따라 분화되고 있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권력엘리트들의 사회적 위신과 권위의 실추를 초래하였다.

넷째, 신흥상인계층의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키워드는 ‘경쟁’, ‘범죄’, ‘뇌물’, ‘규칙 변화’이다. 신흥상인들은 ‘고난의 행군’ 초기의 생존 모색 과정에서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7·1 조치 등 일련의 시장 허용 정책으로 ‘경제적 시민권’을 얻었다. 이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경제적 상층으로 진출하게 된 상인들이 많아졌으며, 상인계층 내부에서 분화가 일어났다. 이들은 북한에서 치열한 경쟁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경험한 첫 집단이다. 불규칙한 생활과 특히 여성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는 이들을 괴롭히는 요인이다. 상인들은 시장활동에서 부딪히는 당국의 규제를 ‘뇌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북한 당국은 시장 허용의 내용과 범위를 수시로 조정하면서 이들의 시장활동을 통제한다.

다섯째,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부양’, ‘출혈노동’, ‘여권’, ‘자립’, ‘차별’, ‘홀로서기’이다. 경제난으로 인해 여성들에게 떠맡겨진 가족부양의 책임은 여성의 과도한 노동과 건강악화를 초래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 내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경제적 자립능력이 향상되는 계기로도 작용하였다. 직종 간 임금 격차 등 취업 및 직장 배치에서의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편 그간 금기시되어왔던 독신여성과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에 국가권력의 지배에 대한 주민들의 대응은 저항보다는 동의와 순응 쪽에 치우쳐있었다. 최근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변화는 그러한 스펙트럼의 이동 가능성을 보여준다. 북한의 주민들은 직장일에 충실한 대신 근무시간을 유용하면서 개인 장사에 몰두한다거나, 관계망과 뇌물을 활용한 비법행위를 통해 부를 축적한다거나, 믿을 수 있는 친지들끼리 모여서 정치적 불만을 토로한다거나, 단속 대상인 남한의 대중문화를 비밀리에 향유하는 등 자신들 나름의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해간다. 이러한 행위들은 국가권력의 지배질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이에 단순히 순응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일상의 이중성이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변화의 양상이 반드시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 주민들이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회적 일탈행위들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완전히 담보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생계 보조와 고용 창출, 심리적 불만 해소 등의 사회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비공식적, 비합법적 활동과 행위들을 일정한 한계 내에서 묵인하거나 허용하는 한편, 이러한 상황이 지나치게 확산되어 체제전복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이데올로기적 통제와 제도적 규제를 가한다. 북한 당국이 사회경제적 난국 타개를 위한 정책 전환 없이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기치로 한 체제 결속과 내부 동원을 전면에 내세운 2009년은 북한 주민 일상의 이중성과 이를 조절하려는 북한 당국의 정책적 의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부딪히는 한해가 될 것 같다.

